

金融自律化의 核心은 金利自由化

尹 源 培

〈淑明女子大學校教授·經博〉

우리나라의 금융은 官治金融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관치금융은 금융전반에 걸쳐 깊숙이 침투하여 금융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각종의 금융문제를 확대 再生産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효율적인 자금동원과 배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비능률의 대명사로 일컬어질 정도이다.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감독해야 할 한국은행은 이미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재무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가격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지정과 인위적인 자금배분은 금융인들이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금융인들로 하여금 정부의 지시에 따라 타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이 硬直化, 官僚化되어 버렸다. 이는 금융부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동원과 배분을 저해하여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실물부문의 발전마저 제약하게 되었다.

한편 세계 경제는 1980년대에 들어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통합화(globalization)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제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金融革新을 통해 고도로 발달된 金融技法을 구사하는 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일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각 분야에 침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금융환경의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금융국제화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본자유화가 이미 금년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는 바야흐로 完全開放을 향해 숨가쁘게 치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은 ① 모든 외국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고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며 ② 금융기관의 설립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설립의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③ 한 국가에 자유화한 사항을 즉시 無條件적으로 모든 서명국에 확대시켜 나아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금융자율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의 금융자율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금융산업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금융을 正常化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도 金融自律化를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全國經濟人聯合會는 관치금융의 철폐를 소리높이 외치고 있다. 그동안 관치금융의 弊害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학계, 금융계 및 재계는 물론 관치금융의 직접 당사자인 財務部마저도 그 철폐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관치금융의 철폐란 바로 금융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융자율화 그 자체이다. 이제 금융

자율화는 금융부문은 물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당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금융을 자율화시키겠다고 수차례 걸쳐 공언해 왔다.

그러나 많은 기업가들은 이윤배반적인 행동과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율화를 외치면서 금리를 내려 달라고 주장함으로써 정부의 금융자율화 노력에 오히려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자유화는 금융자율화의 가장 核心的인 내용으로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금융자율화를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여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는 일관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상반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歪曲된 금융구조 하에서 그동안 누려온 저금리의 특혜는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치만을 취해줄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나 행동으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소비과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토지투기로 인한 부당한 富의 편재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國內貯蓄率이 投資率에 미치지 못해 다시 外債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總需要의 역제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경제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制度金融圈의 자금을 독차지하면서 특혜를 누려온 기업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높은 금리가 기업들의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人爲的으로라도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財務部長官이 전면에 나서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재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금융기관대표들을 위원으로 하는 금융협의회를 구성하여 市場實勢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自律規制토록 하는 한편 채권발행시장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채권발행물량과 채권발행시기를 조절하기로 함으로써 間接金融市場과 直接金融市場을 모두 직접통제하여 금리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강

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들이 일부 금리를 下向調整하고 있으며 이는 자금에 대한 계절적인 非需期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市中金利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리의 하락현상이 恒久的으로 지속되어 적정수준에서 금리가 안정될 수만 있다면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금리인하 노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의 명목금리는 國際水準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금리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일부 기업들의 주장은 어느정도 說得力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는 자금시장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指標일 뿐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것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떨어뜨려 계속 묶어 놓을 수가 없으며 또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해서는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높은 物價上昇率 때문이다. 공식적인 정부의 통계상으로도 소비자물가가 연간 10% 가까이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다. 따라서 名目金利가 높더라도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實質金利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다. 利潤極大化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금리가 높아 기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금을 더 많이 차용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것은 명목금리는 높지만 돈을 빌려쓰는 실질적인 對價 즉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따라서 높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通貨供給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이 연간 18% 이상의 통화공급증가세가 지속되는 한 물가가 안정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며 물가안정 없이는 아무리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친다고 하더라도 명목금리가 항구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정부는 기업들의 아우성에 견디지 못하여 인위적으로라도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금리의 높고 낮음을 돈을 빌려다 쓰는 쪽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편만을 들어서는 안된

다. 돈을 빌려다 쓰는 쪽은 금리가 낮기를 바라지만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금리가 높기를 바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금을 많이 빌려다 쓰고 있는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떠들어 대면서도 자기들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는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정부가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기업들의 金融費用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빌려쓰는데 소요되는 전체적인 금융비용은 표면적인 금리만 인하시킨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자금이 필요한데도 자금을 빌릴 수 없을 경우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대출을 받으면서 금리를 몇 % 더 높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을 경우 기업들은 자금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대출받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 이상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均衡金利하에서 자금의 수급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방법이라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금리문제는 명목금리가 높다는 사실보다는 금리가 價格機構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약하며 금융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다시 정부가 기업들의 주장에 밀리는 척하면서 금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금융정상화의 노력을 수포로 돌려버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손상시키면서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금리인하를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자유화조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재무부장관이 금융협의회까지 발족시키면서 금리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금

용기관들에 대한 特別監査까지 실시하고 있는 판에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國內銀行과 外國銀行 國內支店の 貸出金利가 표면상으로 최고 10% 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금융기관들 스스로 금리를 인하시킬 誘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이다.

관치금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치금융의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계가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나 특혜에 의존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하여 자립해 가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정부도 기업의 경제활동에 간섭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금리를 인하시켜 달라고 하는 相互背反的인 행태는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제도는 행정당국이 行政便宜를 위한 規制目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로서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公正한 경쟁을 제한하여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여 再跳躍할 수 있는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기업들이 관치금융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아시아의 떠오르는 네마리 龍의 先頭走者라는 讚辭를 받아오던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는 하찮은 지렁이로 전락해 버렸다는 외국의 비아냥을 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시적인 성과에 도취하여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 즉 國家競爭力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金融自律化는 바로 그러한 制度的 改革의 일환이며 金利自由化는 金融自律化의 核心的인 内容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금리자유화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